中国, 북한에 開放권유

金日成·江澤民 어제 北京서 1차회담
"세계변화 적응해야"
經済특구 방문계획

金日成

江澤民

【홍콩=金泳秀기자】 中国을 공식방문중인 北韓의 金日成은 4일 江澤民중국공산당총서기와 1차회담을 갖고 한반도 통일문제와 국제정세, 양국간의 우호 강화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江총서기는 김일성에게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 북한의 개방을 권유해 주목을 끌었다.

중국관영 新華통신은 중국외교부대변인의 말을 인용, 양국정상이 이날 北京의 국빈숙소인 釣魚臺에서 오후 4시30분 (한국시간) 부터 2시간동안 회담을 가졌다고 전하면서 이자리에서 김일성은 『한민족, 한국가, 두체제, 두정부에의한 연방제 통일만이 유일한 한반도의 통일방법』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은 김일성이 이어 『연방제 통일만이 남북한 양측이 서로를 삼키지 않고 통일할수있다』고 거듭 강조했으며 『오는 22일에서 4일간 평양에서 남북한 총리회담이 열릴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전했다.

江澤民총서기는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을 지지한다』고 간단히 대답하고 『남북한총리회담이 성공적이기를 희망하며, 북한의 유엔가입을 축하한다』고 짧게 덧붙였다.

江총서기는 이어 『한반도의 통일은 대화와 타협으로 성취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뒤 『중국은 한반도사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있으며, 최근 몇년간의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관계개선이 조선인민들의 열망과 아시아인의 희망과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김일성은 국내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는 안정과 단결을 즐기고 있으며, 올해 농사도 풍작』이라고 말했으며, 이에 대해 江총서기는 『중국은 미래에 자신을 갖고있으며, 지금 세계는 엄청난 변화를 겪고있고 평화와 발전은 시대의 대세가 되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江총서기는 이어 『세계는 진보하고 사회는 발전하며 인민은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역사의 대세』라고 힘주어 말해 김일성에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27번의 비밀발분을 포함, 모두 39번째로 중국을 방문한 김일성은 5일에는 李鵬총리와 회담할 예정이며, 6일에는 楊尙昆 국가주석과 만난뒤 鄧小平과도 비밀회담을 가질것으로 전해졌으며, 3일간의 북경방문을 끝낸뒤 중국남부의 경제특구나 아니면 山東省, 江蘇省을 돌아볼 예정으로전해졌다.

3府요인 초청 오찬
盧泰愚대통령은 4일 세계적 변혁속에 남북한 관계도 통일을 열어가는 큰 전환기를 맞고있다』고 지적, 『외교문제, 특히 남·북문제는 모든 국민의 중지를 모아 여·야가 초당적으로 합께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盧대통령은 이날낮 朴浚圭국회의장 金德柱 대법원장과 民自党의 金泳三대표 최고위원 金鍾泌 朴泰俊최고위원, 민주당의 金大中 李基澤 공동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유엔및 멕시코방문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외교와 남·북문제에대해 여·야가 좋은 의견을 많이 내 기탄없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달라』고당부했다.

拉北인사 유해奉安 허용 촉구
양심과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규탄한다』며 『정부당국은 통일촌비쵸 대표들의 생사확인및 유해봉안을 위한 북한지역내의 활동이 적극협의하라』고촉구했다.

北韓 核사찰수용
유엔회원국 의무
美국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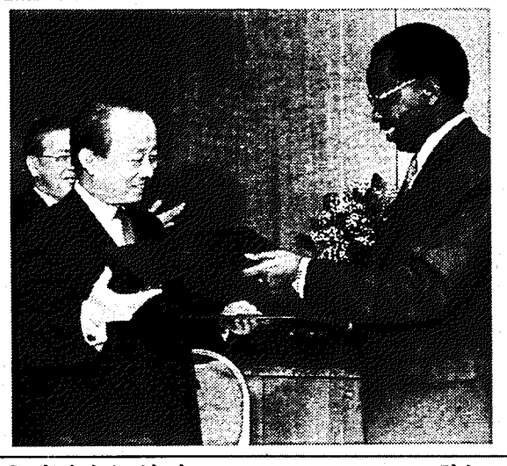
【워싱턴=金昌鎬특파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전면 이행하는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일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유엔 회원국이 되었으므로 유엔헌장상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미국무부가 3일 말했다.

"자동차稅 인상재고"
民自党 정부에 요청

民自党은 내무부가 내년부터 시행키로한 서울등 대도시의 자동차세 50%인상방침의 재검토를 정부에 촉구키로했다.

羅雄培정책위의장은 4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회간접시설확충을 위한 재원확보가 시급하나 자동차 이용자들의부담을 고려치않을수없다는 여·야가 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오늘의 国監 <5일>
▲운영위=대통령 비서·경호실 ▲외무통일위=통일원 ▲재무위=재무부 ▲교정위=확인감사 ▲농림수산위=종합감사 ▲상공위=상공부 ▲교체위=교통부및 산하단체



◇韓-브룬디 협정서 교환 李相玉외무장관(왼쪽)이 3일 뉴욕에서 시프리엔 므보냐파 브룬디 외무장관과 협정서를 교환하고 있다. 양국은 대사급 외교관계를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뉴욕=聯合】

対韓 공중 核우산
美, 계속제공 시사

【워싱턴=聯】 美국방부의 피트 윌리엄스대변인은 3일 核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들이 한국에 계속 주둔하는지의 여부와 관련, 구체적 언급을 피한채 지상배치 核무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도 부인도 않는 NCND정책이 공중核무기에도 적용된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대변인은 재래식무기와 핵무기를 모두적재할수있는 2重기능의 항공기가 유럽에 계속 주둔하는 것처럼 한국이나 한국지역에도 잔류하며 그들은 여전히 핵무기를 운반하는냐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 지상의 핵무기가 철수하더라도 항공기에의한 핵우산은 계속 제공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F15, F16, FNA18, F111機등이 핵무기를 운반할수있는 이른바 2重구조의 항공기로분류된다고 밝히고 그러나지상의 核무기에 대해서와마찬가지로 이들 항공기의핵무기운반 여부에 대해서도 NCND정책이 적용된다며 미국은 이같은 정책을변경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崔전대통령 초청 유엔연설 결과등 설명
全전대통령 불참

盧泰愚대통령은 5일 낮 崔圭夏 전대통령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하며 자신의 유엔및 멕시코방문 결과를 설명하고, 국정운영 전반에관한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청와대측은 지난달 20일 全斗煥전대통령도 이 자리에 함께 해 줄것을 요청했으나, 全전대통령측은 지난 1일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보해 왔다.

「과씸조說」

徐榮澤국세청장이 국회재무위감사에서 現代그룹 鄭周永명예회장一家의 주식거래에 대해 『변칙상속및 증여혐의가 나타나 조사중』이라고 답변한 것을 계기로 정치권이 시끌벅적하다.

재무위는 4일 재무부감사에서도 『現代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그럴것으로 국민들은 생각하고있다』며 「의심가는」 대기업들에 대한 조사확대를 촉구하고 나섰고, 민주당도 대변인논평을 통해 엄정조사를 주장했다. 現代가 국내굴지의 재벌인데다, 관계당국최고책임자가 이례적인 방법을 빌려 조사방침을 밝혔으니 관심이 증폭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번 일에 「보통이상의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있는 것은 정부의 조치가 어떤 정치적 배경을 깔고있는게 아니냐는 각종 추측들과도 무관치 않다 해야겠다.

실제로 徐청장답변이후 정치권주변에서는 現代와 6共 정부와의 不和說을 例示하는 각종 사례들이 봇물터지듯 꼬리를 물고있고, 鄭회장주변의 경제외적인 움직임에 대한 說往說來도 적지않은 상황이다.

현대자동차 승용정비부의 金憲圭차장은적정한가격과 설비를 갖춘 정비업체에서 검사업부까지 해주는 「출장검사장」을 대폭 늘려 국민편의를 도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서도 이런점을 감안, 지난달 자가용승용차의 정기점검제도를 없애기로 방침을 세웠지만, 교통부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못했다.

이같은 지적의 타당성은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검사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돼있다.

자가용이든 영업용이든 소형화물차는 차령 10년까지는 매년 정기점검과 검사를 합께받고, 이후에는 6개월마다 정기검사와 매년 정기점검을 받아야한다.

「출장검사장」 늘려야

정기검사는 정비공장에서 발행해 주는 정기점검기록부가 첨부돼야만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점검이나 정기검사 불이행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의 기준이 대동소이해 운전자에게 2중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래선 대기환경에 절대영향을 끼치는 「스모그체크」 만을 자동차등록시에 검사자격을 갖춘 동네주유소등지에서 간단히 실시토록 하고있다.

그리고 안전검사는 자격을 갖춘 주유소에 몇달러만 내면 기름을 넣은후 수분내에 해준다.

단단한 각오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굴리기가 쉽지 않다. 경제적부담과 시간낭비는 물론 번거로움과 위험을 감수할각오가 있어야하기때문이다.

차를 구입하여 등록하기까지 일일이 명륙조차 기억할수없는 정도의 갖가지 제세공과금을물어야한다. 등록후에는 일상적인 점검외에도 법이 강제하는 주기적인 정기점검과 정기검사를 귀찮을 정도로 받아야한다.

한번에 30여만원 소요

그중에서도 정기점검과 검사제도는 우리나라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으로 지적되고있다.

조그만 사업을 하는 손속의 자동차검사소에 가면 수운전자 朴万壽씨(36·서울도봉구창동)는 최근 승용차를 구입한지 2년마다 받게돼 있는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기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소속 1급정비업체에정기점검을의뢰했다.

그리고 정기검사를 받기위해 교통안전진흥공단소속 1급정비업체에서 그 불합리성과 번거로움에 혀를 내둘렀다고 했다.

법의 규정에 따라 우선 가까운 1급정비업체에서는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으면 곧바로 있는 처지를 감안해 아예 정기검사까지 대행해줄것을 정비업체에 부탁하고 말았다.

하루 꼬박 차를 쓰지 못하고 정기점검과 검사를 받는데 들어간 비용은 30여만원이나 됐다.

깜짝 놀라는 朴씨에게 정비업체측에서 내민 명세서에는 일부 부품 정비요금을 포함한 점검료 10여만원, 책임보험료 14만여원, 도로교통안전협회비 7천여원, 검사수수료 8천원 등이 기록돼 있었다.

「先점검後검사」 비합리

朴씨는 『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 평소 자동차점검을 철저히 하는 편』이라며 『그런데도, 별도로 다시 많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기점검과 검사를 강제로 받게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불평을 털어놓았다.

집에서 20~30km 떨어진 검사소까지 직접 차를 몰고가 검사를 받아본 金炳浩씨(33·회사원·서울 관악구 신림동)는 『수십대의 수검차량들이 앞서 줄을서있는 바람에 20여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검사를받는데 줄잡아 4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며 『검사대행료를 물어가며 검사받는 것이 보통이다. 정비공장이나 검사소의 검사기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이유로 검사소의 검사가 형식에 치우칠 소지는 많은 편이며, 심지어 「비리의 온상화」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정비공장이나 검사소의 검사기준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튼 朴씨의 주장처럼 정기검사까지 자율화 하는 것은 안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술 수준이나 운전자들의 의식수준등으로 미루어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그러나 최소한 정기검사 전에 발게 돼 있는 정기점검은 폐지하거나 정기검사와 일원화시키고, 정기검사 기간도 연장해야 할것이라는 지적들이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운송차량법에 따르면 15일간의 여유를 주는 식으로 방침을 바꾸고 출장검사장수도 늘리는 방안을 채택했다.

美선 주유소서 체크

아무튼 자동차정기검사제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채택하고 있는 「선점검후검사」의 비합리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할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만큼